

## 제 131 호 (2007. 2. 16)

---

- 경제 : 2006년 12월 건설 수주 동향  
2006년 재건축 수주 전년 대비 41.2% 감소  
2006년 건축허가면적, 3년 만에 증가세로
  - 이슈 : 건설산업 인프라 ‘고용보험 전자카드’ 여건 조성 필요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정비 방안
  - 정책 : 최저가 낙찰 저가심의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경영 : 세계 건설시장의 흐름과 한국 해외건설산업의 현실
  - 정보 : 엔저(低) 현상
  - 논단 : 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하자
-

## 2006년 12월 건설 수주 동향

- 2006년 12월 건설 수주액은 민간 토목부문의 수주 급증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23.5% 증가한 18조 2,040억원을 기록함.
  - 민간부문이 토목부문의 급증(전년 동월 대비 267.7%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55.6%나 증가함으로써 12월 건설 수주액 증가를 견인하였음.
  - 민간 토목부문의 급증은 도로 등 민자사업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
  - 공공부문은 작년 5월 25일 상반기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지연됐던 발주물량이 10월과 11월에 정상 발주됨으로써 10월, 11월에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7.6%, 14.8%씩 증가했으나, 12월에는 도리어 16.8% 감소했음.
- 2006년 한 해 동안 건설수주 누계금액은 작년 8월 재개발 시공권 인정시점 변경 관련 제도 변화에 따른 재개발 수주액 급증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8.0% 증가했음.
  -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이 전년 대비 7.2% 감소한 가운데, 민간부문이 전년대비 15.2% 증가함으로써 2006년 건설 수주액 증가를 견인하였음.
  - 민간부문은 민간 건축부문이 전년 대비 17.1%나 증가하여 수주액 증가를 견인했으며, 민간 토목부문도 12월 수주액이 급증함에 따라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3.3% 증가했음.
  - 민간 건축부문의 급증은 재개발 수주액이 158.2%나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임.
  - 반면, 2002년 이후 계속 30조 이상 수주액(경상금액)을 유지했던 공공부문은 5년 만에 다시 30조 미만으로 수주액이 떨어짐. 이는 재정에 의한 신규공사 발주가 줄고 대신 민자사업으로 전환된 결과로 판단됨.

### 2006년 1~12월 건설 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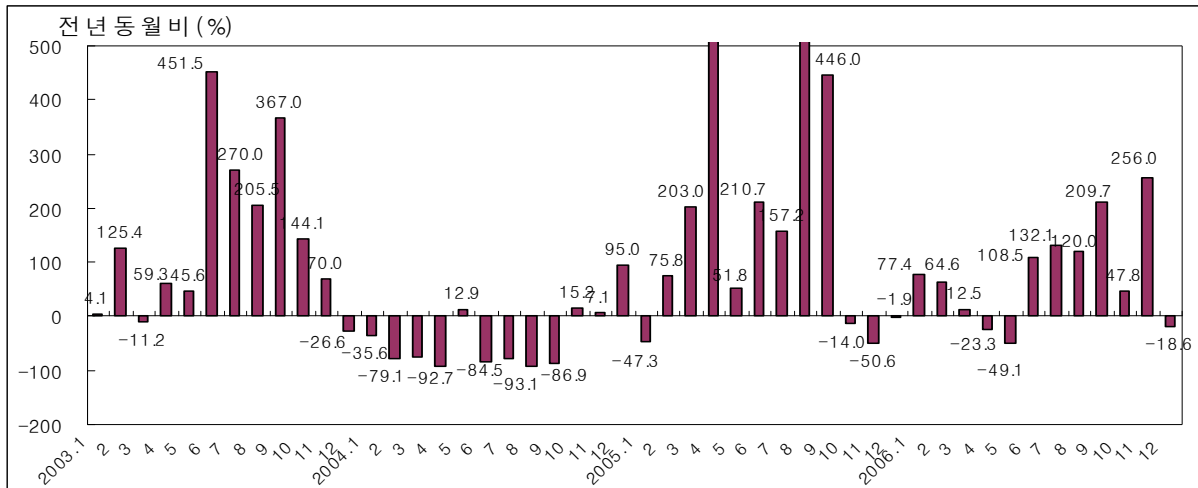
구 분	합계	발주처별						공종별			
		공공	토목	건축	민간	토목	건축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12월	18,204.0	5,440.4	3,957.0	1,483.4	12,763.6	3,542.1	9,221.5	7,499.1	10,704.9	7,760.2	2,944.7
증감률	23.5	-16.8	-15.9	-18.9	55.6	267.7	27.3	32.3	18.0	33.5	-9.6
1~12월	107,318.4	29,519.2	18,642.8	10,876.4	77,799.2	9,739.8	68,059.4	28,382.5	78,935.9	53,276.2	25,659.7
증감률	8.0	-7.2	-11.1	0.2	15.2	3.3	17.1	-6.6	14.4	23.9	-1.2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6년 재건축 수주 전년 대비 41.2% 감소

- 2006년 12월 재건축·재개발 수주액은 전년 동월 대비 18.6% 감소한 1조 6,339억원을 기록함.

### 재건축·재개발 수주 금액 증감률 추이



- 2006년 한 해 동안 재건축·재개발 수주 누계금액은 전년 동기비 42.3% 증가한 19조 375억원을 기록함.
  - 재건축은 전년 대비 격감(-41.2%)한 반면, 재개발이 158.2%나 증가한 14조 4,644억원을 기록함으로써 작년 한 해 건축부문 수주 증가(전년 대비 14.4% 증가)를 거의 독자적으로 견인했을 뿐 아니라 전체 수주액 증가(전년 대비 8.0%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
  - 재건축 수주의 감소는 작년 기반시설부담금제, 초과이익환수 등 재건축 관련 규제가 본격 실시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재개발 수주의 급증은 작년 8월 시공권 인정 시점 변경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앞당겨 재개발 수주 영업을 한 결과로 판단됨.

### 재개발 수주 효과

(단위 : 십억원, %)

구 분	전체	토목	건축	재개발 제외	
				재개발 제외	재개발
2005. 1 ~ 12	99,384.0	30,396.4	68,987.6	63,385.3	5,602.3
2006. 1 ~ 12	107,318.4	28,382.5	78,935.9	64,471.6	14,464.4
증감률	8.0	-6.6	14.4	1.7	1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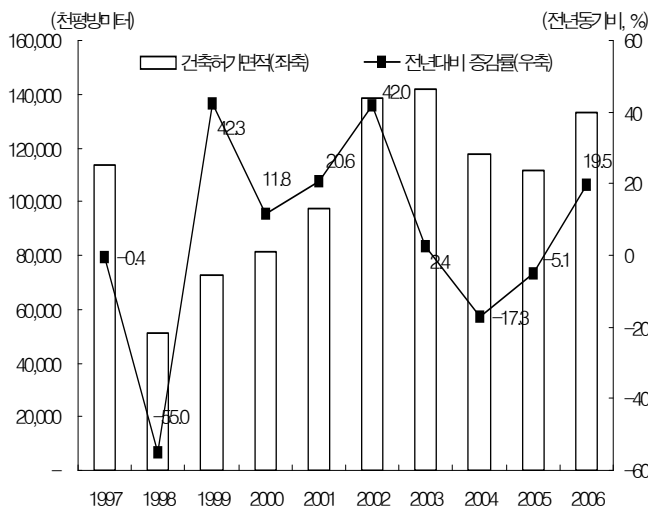
이홍일(연구위원·hilee@cerik.re.kr)

## 2006년 건축허가면적, 3년 만에 증가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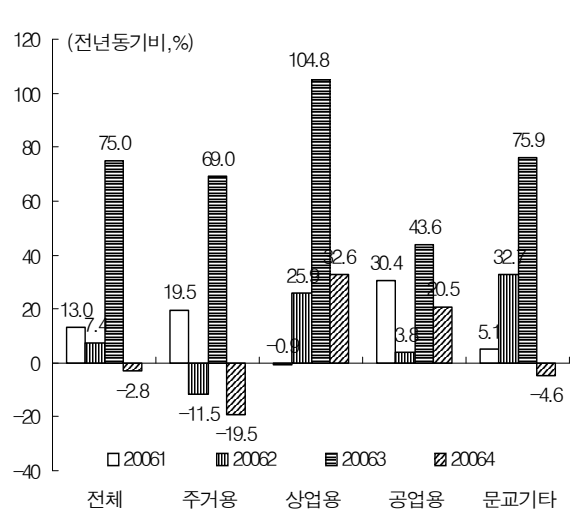
### ■ 건축허가면적 19.5% 증가, 상업용 건축허가면적이 증가폭 가장 커

- 2006년 건축허가면적은 1억 3,327만㎡로 지난해에 비해 19.5% 증가하여 3년 만에 증가세를 나타냄.
  - 건축허가면적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002년 42.0%의 높은 증가세를 보인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2004년과 2005년에는 감소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각각 19.1%, 19.8% 증가함.
- 용도별로는 상업용 건축허가면적이 크게 증가함.
  - 상업용 건축허가면적은 지난 3년간 감소세를 나타내 왔으나 2006년에는 39.4% 증가하여 가장 증가폭이 컸음.
  - 공업용 건축허가면적도 23.8% 증가하였으며, 주거용 건축허가면적도 7.1% 증가함.
- 분기별로 보면 기반시설 부담금을 포함한 제도적인 영향으로 3/4분기에 75.0%나 증가하였으며 4/4분기에는 2.8% 감소함.
  - 상업용 건축허가면적은 2/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주거용은 3/4분기에 급증했으나 4/4분기에는 19.5% 감소함.

연도별 건축허가면적 추이



분기별 건축허가면적 증감률(2006)



강민석(연구위원·mskang@cerik.re.kr)

## 건설산업 인프라 ‘고용보험 전자카드’ 여건 조성 필요

- 건설현장의 고용보험 적용이 어려운 요인 중 하나가 피보험자 관리의 어려움임.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동할 때마다 반복되는 서류 작성 및 신고 행위가 매우 번잡스럽고, 근로자 역시 자신의 누락 여부에 대해 확인이 곤란하며, 고용지원센터는 신고 과정에서 개입된 오류의 정정과 입력 지연에 따른 급여 지급의 지연을 우려함.
- 따라서 잦은 이동과 소득 변동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건설 일용근로자를 피보험자로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음.
  -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고용보험 전자카드임.

### ■ 고용 개선, 나아가 건설산업의 인프라

- 현재 건설산업이 직면한 위기 중 하나는 숙련 인력 기반의 와해임. 직업 전망 부재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지속된 젊은 층의 진입 기피가 결국 건설인력 고령화로 귀결되고 있음.
- 따라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고용개선을 통한 건설근로자의 진입 촉진과 육성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인프라에 해당하는 여건이 바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개선과 고용보험 전자카드에 의한 경력관리 체계의 구축임.
  - 전자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시킴으로써 공사비 누수에 의한 근로환경 악화를 막는 한편 고용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후자를 통해 건설 일용근로자의 신분과 경력을 되찾아 공식 제도의 적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이러한 기반 위에 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 차원에서 산업안전 및 사회복지 적용, 근로복지, 교육훈련 및 자격, 취업알선 등 고용개선 방안이 도입되고 추진될 수 있음.

### ■ 미흡한 성과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 필요

- 이렇듯 중요한 고용보험 전자카드가 3년여에 걸친 시범사업 과정에서 보여준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 2006년 3월 현재 전자카드 보급 대상인 수도권 지역 200억원 이상 건설현장 중 전자카드를 활용하여 신고한 비율은 원수급자의 경우 15.1%, 하수급자의 경우 6.9%에 그쳤기 때문임.
  - 하지만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

## ■ 활용이 미흡한 실제 이유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05년에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전자카드의 성과와 더불어 전자카드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엿볼 수 있음.
  - 근로자의 경우 전자카드 적용 대상 사업장이 적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불합리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될 것에 대해 거부감이 많음.
  - 사업주의 경우 발급 시간 과다, 업체 지정 이전에 카드 소지자가 체크할 경우의 정정 곤란 등의 기술적인 문제점 이외에 연금 및 건강보험의 가입 요구, 근로자에 대한 설득 어려움, 사회보험 및 관련 제도의 다원화에 따른 어려움, 발급 대상을 일용근로자로 한정할 경우의 혼란 가중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 예정된 여건 변화

- 최근 추진되는 다음의 여건 변화가 전자카드의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2007년 1월부터 낙찰률과 무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 확보가 가능해짐.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징수 방식을 고지납부 방식에서 사실상 당월 실제소득에 기초한 자진납부 방식(고지징정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추진함.
  - 국세청은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을 위해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지급조서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시공참여자체도를 2008년 1월부터 폐지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 중임.
  -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업무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음.

## ■ 추가적인 여건 조성 필요

- 최저가낙찰제 적용의 확대 유보,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의 확보, 주휴수당의 확보, 겨울철 생산중단 시기의 인건비 경감 등이 요구됨.
- 임금 체불, 산재 발생, 자격시험 응시, 소득 증빙 등에 필요한 신분 및 경력 입증 자료로서 전자카드의 유용성에 대해 건설 일용근로자를 설득해야 함.
- 유관기관에게도 초기 인프라 구축비용을 각출하도록 요구해 적용 확대를 촉진함.

##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정비 방안

### ■ 현황

-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물의 건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
  -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개발로 인해 유발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충당이라는 재정충당형 특별부담금 본연의 목적보다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개발의 이익 환수 측면에서 도입

### ■ 제도 정비 방안

- 제도의 기본 토대 구축
  -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개별적 기반시설의 용량 기준 수립 및 현재 기반시설 용량과 과부족 용량의 데이터 구축을 통해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수요 유발 여부 결정 및 추가 수요량 결정의 신뢰성 제고 필요
  - 또 부담금을 납부하는 건축주가 유발하는 기반시설의 추가 수요 유발 범위 및 편익 향유의 범위 설정 필요
  - 부담금 부과 적합성 제고(업무용 및 상가 건축시에는 부과의 필요성이 결여된 근린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 비용을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부과하는 문제점 해결)
  - 건축주가 향후 도시계획세, 취·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부담하게 될 경우 이중 부담의 문제 해결
  - 징수된 부담금과 관련된 기반시설의 공급 시기 확정 등
- 부담금액의 합리적 조정
  -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 안정과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 기준을 현행 200㎡에서 660㎡로 상향 조정(법 제6조 제2항 개정 사항)하여 다세대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중·소 규모 건축물 공급 활성화 유도
  - 도시별 또는 도시 내부 지역별 기반시설의 현재 용량 및 도심 내부의 현재 상태(도

심 쇠퇴, 도시 정체 등)를 고려하여 부담금 산정에 반영하는 (가칭) 부담금 보정계수의 도입 검토

－ 현행 2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부담금의 조정 범위를 50%로 확대 검토

• 면제 및 경감 대상 확대

－ 재정비촉진지구는 사업 주체가 실제로 공공이며 광역 개발을 통하여 충분한 기반시설이 확보되므로 20년간 면제 대상에 포함

－ 뉴타운 사업 또한 과거에 비해 공공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여 충분한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도시계획 사업이므로 20년간 면제 대상에 포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주택 재개발 사업도 주거환경개선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20년간 부담금 면제 또는 50% 경감 대상에 포함

－ “개발밀도관리지역”, 「재래시장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 건물 등은 과밀 부담금이 50% 감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50% 경감 대상에 포함

－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 납부 시기의 조정

－ 부담금의 납부 시기를 준공시 또는 입주시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 관련 부담금 제도의 통폐합 추진

－ 개발 및 건축 관련 부담금을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통합 및 단순화하는 제도적인 개선 필요

－ 또 부담금 운영시 부담금 기본원칙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며, 재정충당형 특별부담금으로 분류되는 부담금은 국민의 일반적인 재정 책임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므로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운영

강운산(연구위원·wskang@cerik.re.kr)



## 최저가 낙찰 저가심사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 배경

- 정부는 작년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면서 무모한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저가심사제를 보완 시행한 바 있음.
  - 저가심사제의 취지는 업체가 적절한 가격으로 수주해서 적자를 보지 않으며, 발주기관은 공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 저가심사제는 발주관서의 재량과 판단이 따르므로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현재의 저가심사제는 우리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단계의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1단계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적정 입찰 공종을 골라냄.
  - 공종별 조사금액의 65% 미만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 공종별 조사금액보다 오히려 10% 이상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 ※ 위의 경우 입찰시 사유서 첨부 제출 의무화
  - 당해 공종의 기준금액(해당 공종 설계금액 70% 반영+입찰자의 해당 공종 입찰 평균 금액 30% 반영)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
  - ※ 이 경우 입찰 후 발주관서의 요청에 의해 입찰자가 입찰 후 사유서 제출
- 2단계에서는 부적정 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에 대해 발주기관이 주관적 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 ※ 마이너스 입찰금액이 있거나 입찰금액 합계의 오차가 일정 범위를 초과한 경우 등은 심사와 관계없이 낙찰 대상에서 배제

### ■ 문제점

#### 가. 1단계

- 1단계 심사를 이같이 정한 이유는 저가심사 대상 범위를 공종별로 한정하고 시장가격인 평균 입찰금액을 심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함임.

• 이에 따른 문제점은

- 공종 기준금액에 입찰자의 해당 공종 입찰 평균금액 30%를 반영하고 이보다 20% 이상 낮으면 부적정 공종에 해당되도록 함에 따라 경쟁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몇몇 입찰자간 공모하여 공종별 기준금액 흔들기를 하는 유사담합 시도임.
- 또한 입찰자의 해당 공종 입찰 평균금액의 30%를 반영함에 따른 공종별 기준금액의 변동성으로 인해 1단계 심사의 통과 여부에 운찰제 경향이 다소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는 실정임.

나. 2단계

- 2단계 주관적 심사는 무모한 저가 입찰인지 기술력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가격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최저가낙찰제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목표를 지님.
  - 낙찰자 결정권이 법령으로 정한 분명한 기준(최저가)에서 발주관서로 이관되는 의미가 있고
  - 주관적 심사인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문제를 안고 있음.
  - 이는 제도의 환경 요인과 연결되어 사회적 신뢰 수준이 중요한 변수인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 수준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님.
  - 현재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에서 기본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초기 단계에 불과함.
  - 앞으로 심사 기법이 개발되어 건설업체의 기술력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심사 능력도 축적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 현재 업계에서는 기술 발전의 실효성도 별로 없으면서 2단계 심사 서류를 작성하는 잔기술만 늘어간다는 비판이 있음.
  - 주관적 심사를 실제로 실시하는 기관도 투명성이 비교적 우수한 조달청을 비롯한 주요 공기업들임.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주관적 심사에 로비 행태가 보인다고 우려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그러나 주관적 심사의 정착 및 달성은 정부와 건설업계가 건설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앞으로 갈 길이 멀.

### 3. 개선 방안

- 1단계 심사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정부내 일각에서 차제에 1단계 심사를 폐지하고 아예 2단계 심사만 하자는 의견이 있음.
  - 이는 원칙적으로 옳고 저가심사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임.
  -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같은 제도 개선은 시기 상조임.
  - 주관적 심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현재 턴키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로비 의혹과 공정·투명성 시비가 최저가낙찰제에 그대로 재현되어 혼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1단계 심사는 존치하되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극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단계에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임.
  - 유사담합을 통해 입찰금액을 높이 제시하여 입찰자의 입찰 평균금액에 미치는 영향 차단 필요
  - 이를 위해 입찰자의 공종별 입찰 평균금액 산정시 제외 대상 입찰금액을 조정
  - (현행)공종별 입찰금액 순위 상·하위 각 10% 이하 제외
  - (개선)공종별 입찰금액 순위 상위 제외폭 확대(예 : 30% 이하)
  - 이와 함께 공종별 기준금액의 변동성으로 인한 1단계 심사의 운찰제적 요소의 최소화를 위해 공종 기준금액 산정시 입찰자의 입찰 평균금액 반영 비중(현행 30%)을 보다 낮출 필요가 있음(예 : 10~20%).

백영권(연구위원-ykbaek@cerik.re.kr)

## 세계 건설시장의 흐름과 한국 해외건설산업의 현실

### ■ ENR을 통해 본 세계 건설시장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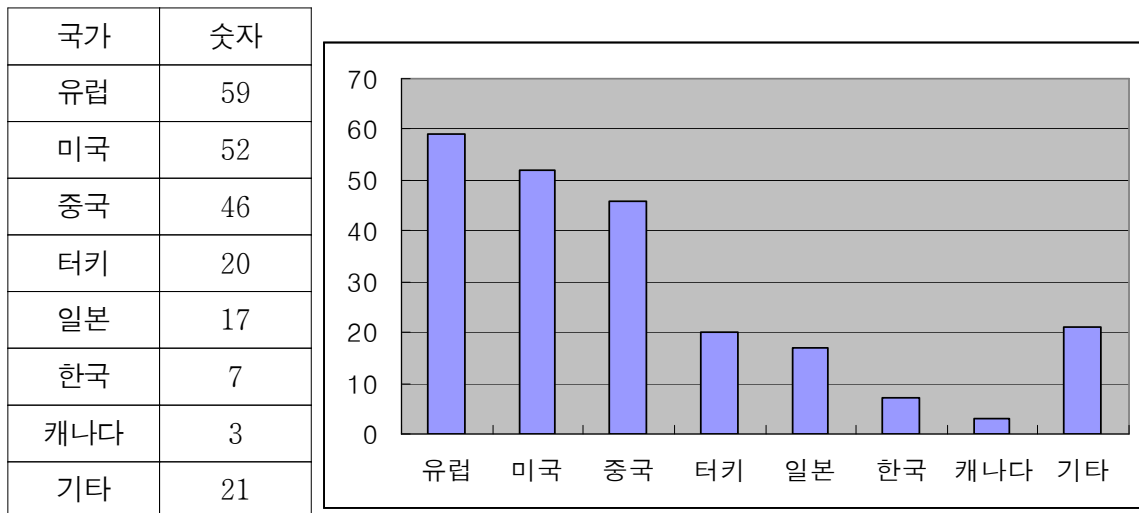
- 세계 건설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의 건설붐과 함께 고유가에 힘입은 중동 건설시장의 성장을 특히 주목
  -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도 높은 성장세
  - 호주도 건설붐이 지속. 유럽 시장은 약간의 회복 기미. 중남미 시장도 구리 등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 요동. 반면에 과거 한국 건설업체들의 주력 시장이었던 동남아(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시장은 정체상태
-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역시 유가
  -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원유 관련 사업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에너지 사업(수력, 지열, 태양열 등)까지 확대
- 2005년에 세계 200대 설계업체들은 해외시장에서 2조 6,310억 달러의 매출액을 올려 전년대비 8.9%의 성장세
  - 설계업체들은 경영 컨설팅까지 담당하려고 노력
  - 세계 225대 건설업체의 2005년 해외건설 매출액은 189조 4,100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13.1%의 성장세. 이들 건설업체들은 자국 시장에서도 전년 대비 11.5%의 매출액 성장세를 기록
- 전 세계적인 건설붐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유럽과 미국 시장에만 주력하는 건설업체들도 많음.
  - 예컨대 Skanska사의 CEO는 유럽과 미국 시장 밖에서는 부패(corruption) 문제 때문에 진출하기 어렵다고 언급. 정치 경제적 안정성, 명확한 조달 규칙과 투명한 법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는 나라에는 진출하지 않겠다는 업체도 있음.

### ■ 세계 225대 건설업체 중 한국 업체는 7개, 세계시장 점유율은 1.3%에 불과

-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225대 건설업체에 가장 많은 업체가 포함된 나라는 역시 미국
  - 한국 건설업체는 7개사만 225대 건설업체에 올라 있음.

-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면, 미국이 18.4%로 1위, 프랑스가 15.3%로 2위, 독일이 11.5%로 3위, 일본이 8.5%로 4위, 영국이 6.7%로 5위, 스페인이 6.6%로 6위, 중국은 5.3%, 터키가 1.9%, 한국은 1.3%를 차지.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2005년에도 100억 달러를 넘는 호황이었지만, 세계 건설시장에서는 여전히 초라한 수준

세계 225대 건설업체의 국가별 분포



- 세계 225대 건설업체의 2005년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1% 상승. 신규 계약 실적은 21.8%나 증가

■ 해외건설, 지난해 사상 최대인 165억 달러 수주, 금년에는 180억 달러 전망

- 작년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한 한국 건설업체 수는 무려 178개사였고, 49개국에서 326건, 165억 달러를 수주. 작년 2월에는 해외 건설시장 진출 41년 만에 누계 수주액이 2,000억 달러를 초과
- 해외건설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세계 건설시장의 고성장 기조 속에 고유가에 힘입은 중동 건설시장 활성화
  - 한국 건설업체들의 대외 신인도 향상과 더불어, 주요 발주처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고부가가치의 대형 플랜트공사 수주 경쟁력 향상
- 2007년의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작년 대비 약 10% 증가한 18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해외건설협회에서는 전망

## 한국 해외건설업체의 지역별 수주 실적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대비(B/A)
	건수	금액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중동	46	3,571	73	6,445	59	9,530(57.9)	147.9
아시아	138	2,275	158	2,611	187	4,046(24.6)	155.0
아프리카	15	712	15	1,275	27	1,557(9.4)	122.1
미주·태평양	19	135	27	353	31	822(5.0)	232.9
유럽	6	805	8	175	22	513(3.1)	293.1
총계	224	7,498	281	10,859	326	16,468(100.0)	151.7

주 : ( )는 전체 수주액의 점유율.

자료 : 해외건설협회.

- 최근 한국 해외건설 수주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중동(2006년에는 57.9%). 공중은 플랜트(2006년에는 66.3%). 전통적인 건설공사라고 할 수 있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수주 비중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속적으로 하락

#### ■ 한국 해외건설산업에 주는 시사점

- 세계 225대 건설업체의 매출액은 중동/플랜트시장보다 유럽/빌딩·교통부문 시장의 비중이 훨씬 더 큼. 중동/플랜트 시장에 치중하고 있는 한국의 해외건설업체들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출 시장 및 주력 분야의 재편을 고민할 필요
- 중국 업체들이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다는 사실. 특히 세계 200대 설계업체 가운데 중국 업체 수가 14개인 데 반해 한국 업체는 겨우 3개에 불과
- 국내 건설시장의 정체로 인하여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
- 세계 건설시장의 흐름을 볼 때, 한국의 해외건설산업은 진출 지역과 주력 상품의 다변화, 설계분야의 국제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과제

이상호(연구위원 · shlee@cerik.re.kr) · 박성민(연구위원 · smpark@cerik.re.kr)

## 엔저(低) 현상

### ■ 최근의 엔화 환율 추이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폭 확대로 원화 및 중국 위안화 등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엔화는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음.
- 분기별 엔/달러 평균 환율은 2005년 3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달러당 110엔을 기록하고 있음.
- 분기별 원/엔 평균 환율도 2005년에 100엔당 900원대를 기록하였고, 2006년에는 100엔당 800원대를 기록하다가 4분기에는 100엔당 797원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위안/달러 분기별 평균 환율은 2004년 1분기에 달러당 8.28위안을 기록하던 것이 2006년 4분기에는 7.87위안을 기록하였음.
- 원/달러 분기별 평균 환율은 2004년 1분기에 달러당 1,171원을 기록하던 것이 2006년 4분기에는 938원을 기록하였음.

최근 2년간 분기별 평균 환율 추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엔/달러	107	110	110	106	104	108	111	117	117	115	116	117
원/엔(100엔)	1,092	1,060	1,052	1,034	979	937	925	884	836	830	822	797
위안/달러	8.28	8.28	8.28	8.28	8.28	8.28	8.14	8.08	8.05	8.01	7.97	7.87
원/달러	1,171	1,162	1,155	1,094	1,022	1,008	1,029	1,037	978	950	955	938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http://www.bok.or.kr)) 경제통계시스템(ECOS).

### ■ 최근 일본의 경제 성장률 및 경상수지 추세

- 일본경제는 2002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인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고 경상수지도 지속적으로 흑자를 시현하고 있음.
-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2003년 회계연도 2.1%, 2004 회계연도 2.0%, 2005 회계연도 2.4%이고, 2006년에도 2% 이상의 성장을 시현하였음.
- 일본의 경상수지는 2003년 17조 2,972억엔, 2003년 18조 2,096억엔을 시현하였고, 2006년에도 1분기에 5조 5,248억엔, 2분기 3조 9,737억엔, 3분기 5조 2,927억엔을 시현하여 매년 GDP의 3% 이상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음.

## 최근 일본의 경제 성장률 및 경상수지 추이

(단위 : %, 억엔)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분기	2분기	3분기
경제성장률	2.1	2.0	2.4	2.9	2.1	1.6
경상수지	172,972	182,096	191,233	55,248	39,737	52,927
경상수지/GDP	3.5	3.7	3.8	4.0	3.4	3.7

자료 : 일본은행 홈페이지(www.boj.or.jp) 統計.

주 : 연도별 수치의 연도는 회계연도(fiscal year)이고, 분기별 수치의 연도는 서력연도(calendar year)임.

## ■ 엔화 약세 요인

- 일본이 2003년 이후 2%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GDP의 3%를 상회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근본 원인은 첫째, 일본과 구미간의 금리 차이임.
  - 미국은 정책 금리인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5.25%를 유지하고 있고, 유럽중앙은행(ECB)도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정책금리를 3.25%를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하여, 일본은 정책금리인 콜금리(call rate)를 0.25%로 유지하고 있음.
  - 일본은 2006년 7월 제로금리 정책을 폐기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당초 기대보다 용이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부상
- 두 번째 엔화 약세 요인은 일본가계와 기업의 해외투자 증가임.
  - 2005년 4분기 이후 일본 가계 부문의 해외투자 증가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함.
  - 일본 기업의 활발한 해외투자 활동도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엔고 압력을 억지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일본기업은 경영 성과 향상을 통해 확보한 풍부한 자금을 해외투자 및 M&A를 활발히 추진하여 최근 일본의 해외투자 규모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상회하고 있음.
- 세 번째 엔화 약세 요인은 수출 기업의 글로벌화
  - 대형 수출 기업의 대다수는 생산 등 해외 사업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출 대금의 일정 부분을 외화 상태로 보유하여 활용함.
  - 반면 수입 기업은 수출 기업과 달리 해외조달 상품의 판매처가 일본 국내이기 때문에 수입결제를 목적으로 한 외환 확보 필요성이 강함.

이의섭(연구위원·eslee@cerik.re.kr)



## 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하자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 타협은 없다. 수도권측에서는 ‘실효성도 없이 수도권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수도권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지방측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현재의 수도권 규제 수준은 유지 또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서로가 양보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당이나 수도권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각자의 출신 지역에 따라 고착된 입장을 가지고 한 치의 양보없는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무엇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 수도권과 지방 간에 타협을 통해 합의가 가능한 정책 대안을 발굴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실용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방에 49개 중앙 행정기관과 175개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대신, 수도권에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 공장에 대한 신증설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취약한 지방의 성장 발전기반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에 대한 보호 장치도 같이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대기업에 대한 신증설을 허용하되 현재 적용되고 있는 총량제 범위는 지키도록 하여 과도한 신증설을 방지한다든가, 총량 적용기준을 지금처럼 공장 건축면적이 아닌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수도권은 자본 집약적인 공장이 입지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지방은 노동 집약적인 공장이 입지하여 지방 공동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신증설되는 대기업 공장에서 징수하는 법인세는 따로 주머니를 마련하여 지방 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등등, 지방을 보호하고 지방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경쟁이 국가내 경쟁에서 국가간 경쟁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우리와 같이 수도권 규제를 시행해 오던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 일본도 40년간 유지해 오던 수도권 규제를 지방의 반발을 무릅쓰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2002년 11월 전면 폐지하였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최재덕(원장:jdchoi@cerik.re.kr)